

은행권 경영 · 영업 관행 · 제도 개선 방안

2023. 7. 5.

금 융 위 원 회
금 융 감 독 원

목 차

I. 추진배경 및 경과

- 1. 추진배경 1
- 2. TF 운영 경과 2

II. 주요 과제별 개선방안

- 1.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 3
- 2. 고정금리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8
- 3. 손실흡수능력 제고 10
- 4.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12
- 5. 성과보수체계 개선 및 주주환원정책 점검 14
- 6.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16

III. 향후 계획 1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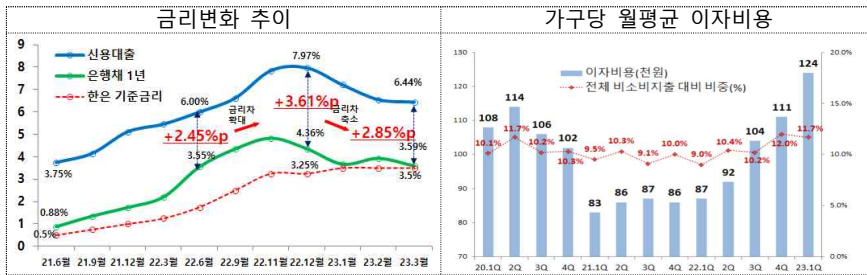
IV. 추진현황 및 추진일정 19

[참고] 그간의 성과 20

I. 추진배경 및 경과

1 추진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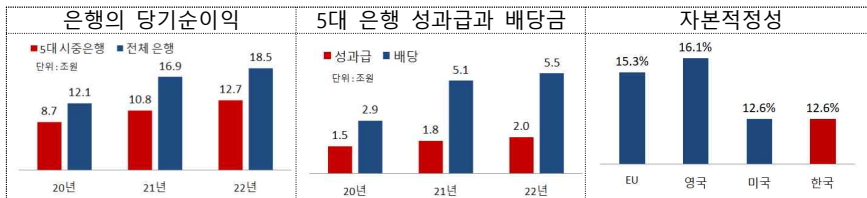
- '22년부터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상승되면서 국민들은 늘어난 금리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
 - '22년말 금융시장 불안과 함께 과도한 수신경쟁으로 조달금리가 상승하면서 대출금리도 급격히 상승
 - 특히, 가계대출은 금리변동이 큰 상품이 대부분이어서 금리상승 부담이 차주들에게 대부분 전가(→ 은행 수익 증가)



- 5대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적 구조하에서 은행들은 코로나로 늘어난 대출규모를 기반으로 역대 최고 수익을 달성

※ 은행 대출금(조원) : (17) 1,636 (18) 1,739 (19) 1,850 (20) 2,047 (21) 2,232 (22) 2,368

- 은행 이자수익이 미래를 위해 활용(자본확충, 벤처투자 등)되거나 국민에게 환원되기 보다는 임직원과 주주를 위한 성과급과 배당으로 지급



⇒ 국민들에게 보다 낮은 비용(금리)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고, 은행권 수익구조와 수익 활용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

2 TF 운영 경과

- 2.22일 금융위·금감원은 은행권 경쟁촉진 등 6개 과제*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은행권 경영·영업 관행·제도 개선 TF** 즉시 가동

* ①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, ②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, ③ 손실흡수능력 제고, ④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, ⑤ 성과급·퇴직금 등 보수체계 개선 및 주주환원정책 점검, ⑥ 사회공헌 활성화

** 구성 : 금융위(부위원장 주재), 금감원, 한국은행, 민간전문가, 소금융권협회, 연구기관 (금융연구원·보험연구원·자본시장연구원·보스턴컨설팅그룹) 등

- 그간 총 15차례 회의(TF 3회, 실무작업반 12회)를 거쳐 6개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

-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민간 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거쳐 즉시 개선방안을 발표
- 쟁점이 다양하고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과제*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방안을 마련

* 은행 신규인가, 특화전문은행, 비은행권 지급결제 등

< 기 발표된 과제별 주요 개선방안 >

검토과제	주요 내용
① 은행권 경쟁촉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대환대출인프라 구축 : 5.31일 가동 ■ 온라인 예금중개서비스 : 6.21일부터 가동 ■ 예대금리차 공시 강화 : 7월 시행
② 고정금리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고정금리 확대를 통한 가계부채 질적구조개선(5.25일 발표)
③ 손실흡수능력제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,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(3.16일 발표) ■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,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 체계 구축(3.16일 발표)
④ 비이자이익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투자자문업 확대(21.10월) 및 신탁업 혁신(22.10월) ■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한도 2배 상향(4.20일 발표)
⑤ 성과보수 체계개선 및 주주환원 정책점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임원에 대한 성과보수 제도개선(4.20일 발표) ■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(6.15일 발표)
⑥ 사회공헌활동 활성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은행점포 폐쇄 내실화(4.13일 발표)

Ⅱ. 주요 과제별 개선방안

1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

(1) 현황 및 문제점

- 은행업은 정량적*으로는 경쟁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나, 은행권 경쟁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는 매우 낮은 상황

* '22년 경쟁도 평가 결과, 시장집중도를 판단하는 대표지표인 HHI지수는 1,660~1,749 (HHI≤1,000 집중되지 않은 시장, 1,000<HHI≤1,800 다소 집중된 시장, 1,800<HHI 매우 집중된 시장)

- 은행업의 핵심인 대출·예금의 경우, 특정은행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으나, 5대 시중은행이 쏠은행권 대출·예금의 약 70%* 점유

* 쏠 은행권내 5대 시중은행 비중(22년말) : 대출 63.5%, 예금 74.1%, 자산 63.4%

- 은행들은 비슷한 금리의 유사하거나 동질적인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어, 국민들이 실질적 경쟁효과를 체감하는 데 한계

- '92년 평화은행 이후 인터넷전문은행 3사*를 제외하고는 시중·지방은행에 대한 새로운 인가가 없는 상황

* 케이뱅크('16.12월 인가, '17.4월 영업개시), 카카오뱅크('17.4월 인가, '17.7월 영업개시), 토스뱅크('21.6월 인가, '21.10월 영업개시)

- '17년 이후 신규 진입한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은행권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%(22년말 예금 2.6%, 대출 2.0%) 수준에 불과

(2) 개선방안

- ◆ ㉠신규플레이어 진입 허용, ㉡여타 플레이어를 통한 경쟁 촉진, ㉢금융과 IT간 협업 강화, ㉣대출·예금금리 경쟁체계 구축을 통해 은행권 금리 및 서비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쟁을 촉진

가. 은행권에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촉진

① 기존 금융회사의 은행 전환* 적극 허용

* 지방은행 → 시중은행 / 저축은행 → 지방은행

- 은행업 영위 경험이 있는 주체가 업무영역·규모 등을 확대하는 것으로 단시일내 안정적·실효적 경쟁 촉진 가능

☞ 금융회사가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, 금융당국은 전환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

※ 현재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 상황

※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의 의미

➡ “30여년만에 시중은행 진입” & “지역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 출현”

【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기대효과】

- 수도권 및 지방은행이 없는 충청·강원 등에서 여수신 경쟁 확대
- 외국계 은행 만큼 대출하는 시중은행 출현(SC 45조원 / 대구은행 51조원)

② 시중은행·지방은행·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

- 現 과점적 구조인 은행산업을 언제든지 경쟁자가 진입할 수 있는 경쟁시장으로 전환

- 기존에는 사실상 금융당국에서 인가방침 발표 후 신규 인가 신청·심사가 진행되었으나, 앞으로는 충분한 건전성과 사업계획 등을 갖춘 사업자에게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신규 인가

☞ 건전성과 사업계획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시중·지방·인터넷전문은행을 신규 인가

※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의 경우 현행 법령상 요건과 함께 現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성과 및 안정성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심사

③ 특화전문은행 지속 확산

- 현재도 이미 신용카드업, 저축·지방은행, 인터넷전문은행, 혁신금융서비스·업무위탁 등을 통해 다양한 특화된 은행 서비스가 제공중
- 이들 특화 은행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서는 일반 은행 인가요건보다 완화된 인가기준이 적용
- 우선 특정분야에 전문화된 신규인가 신청시,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신청하는 영업 특성에 따라 인적·물적 요건 등을 탄력적으로 심사
- 향후 특화전문은행의 필요성, 성과,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, 특화유형에 따른 인적·물적 설비나 건전성·유동성 규제 차등화 등을 포함한 제도 도입방안 검토

나. 여타 플레이어를 통한 시중은행과의 경쟁 촉진

①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를 통한 예금·대출 분야 경쟁 확대

- 저축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은행과의 경쟁촉진과 사전적 구조조정을 위해 저축은행간 인수·합병범위를 확대하는 등 저축은행의 영업규제 합리화

* 구조조정 목적이거나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제한없이 4개사까지 인수(합병의 경우에는 영업구역 4개까지)를 허용하여 저축은행 M&A 촉진

☞ '23.7월중 저축은행 인가지침 개선방안 발표 예정

② 지방은행·외은지점 규제개선을 통한 은행권 경쟁 촉진

-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과 관련된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합리화*하여 시중은행과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(7.1일 시행/한은)

* (기준) 지방은행 60%, 시중은행 45% → 50%로 일원화

- 외은지점의 원화예대율 규제를 개선*하여 기업대출 공급여력이 증가(+12.2조원 추정)됨에 따라 기업들의 대출선택권 확대·금리 인하 가능

* ①예대를 적용 대상을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에서 4조원 이상으로 완화, ②본지점차입금 중 장기차입금 전체와 단기차입금(한도 : 장기차입금의 50%)을 원화예수금으로 인정

☞ '23.7월 외은지점 원화예대율 규제개선 관련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완료 예정

③ 증권사 등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 확대·허용 지속 검토

- “동일 기능-동일 리스크-동일 규제” 원칙하에 지급결제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담보제도, 유동성·건전성 관리 등에 대해 추가 검토하여 추진

다. 금융권간·금융-IT간 협업 강화

①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대출 활성화

-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자금 및 경영상의 강점*을 결합한 대출상품을 출시하여 더 많은 금융소비자에게 은행권 금리혜택 제공

* 인터넷전문은행 : 우수한 모객력 / 지방은행 : 양호한 대출여력

☞ 부수·점영업무 신고시 적극검토 등 조속한 상품 출시를 지원

② 혁신금융서비스 적극 활용

- IT·플랫폼기업의 첨단 기술, 넓은 고객접점 등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의 질적·양적 개선 추진

☞ 경쟁촉진 효과가 기대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

※ 네이버페이(예금중개)와 하나은행(계좌개설)이 결합한 예금통장(7월 계좌한도 확대), 쿠팡페이(예금중개)와 하나은행(계좌개설)이 결합한 예금통장(혁신서비스 지정 검토중) 등

③ 핀테크 등 IT기업의 금융업무 수행범위 확대

- 업무위탁 가능 범위 확대 등 업무위탁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핀테크 등 IT기업의 금융 관련 업무 수행 범위 확대

* (예시) 기존에는 금지되었던 대출심사를 위한 개인신용조사, 담보물 평가 등을 허용

☞ TF 등을 통해 '23.3분기내 업무위탁 제도개선방안 마련 예정

라. 기존 금융회사간 대출·예금 금리경쟁 촉진

①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인프라 구축

- 대출 고객은 온라인을 통해 기존 신용대출을 다른 금융회사의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손쉽게 갈아타기(기존 1~2영업일 → 10~15분 소요) 가능

☞ 53개 금융회사, 23개 대출비교플랫폼이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에 참여하여 '23.5.31일부터 운영중

☞ '23.12월까지 신용대출 외에도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 예정

【대환대출인프라의 주요 효과】

- ① 6.30일까지 총 26,883건, 6,684억원의 대출자산 이동이 발생
- ② 현재까지 100억원 이상 연간 대출이자 절감 추정
- ③ 소비자의 평균 금리인하 폭은 1.6%p 수준
- ④ 은행간 이동 비중이 80%이상으로 신규진입 없이도 은행 간 경쟁 활성화 효과
- ⑤ 주요 은행이 기존고객 유지를 위해 대출연장시 금리인하 등 제공

②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구축

- 예금 고객은 금융회사간 예금상품을 손쉽게 비교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예금 가입 가능

☞ '22.11월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된 9개사는 '23.6월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시중(6.21일 신한은행 개시)

☞ '23.6.21일 16개사를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추가 지정

☞ '23년말까지 중개서비스 대상에 수시입출금 포함여부*, 모집한도 상향 여부** 등을 검토할 예정

* 현행 중개서비스 대상 : 정기 예·적금

** 현행 모집한도 : 전년도 신규모집액의 5%(은행), 3%(저축은행, 신탁) 미만

③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개선

- 금리동향 뿐 아니라 수익관련 지표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도록 은행별 예대금리차 공시범위를 신규취급액 기준에서 잔액기준 까지 확대
- 국민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전세대출 금리도 비교공시 항목에 추가
- 은행별로 전체 가계대출 금리를 기준금리, 가산금리, 우대금리로 세분화하고 은행별 특수성 설명을 위한 '설명페이지'도 신설

☞ '23.7월말부터 개선된 제도에 따른 예대금리차 공시 시행 예정

2 고정금리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

(1) 현황 및 문제점

- 주담대 중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*, 금리 상승시 차주 부담 확대

* 주담대 비중(추정치) : 순수고정 25.7%, 혼합 20.9%, 변동형 56.0%

- 은행의 자체 고정금리 대출비중이 매우 낮고*, 고정금리 중심의 정책 모기지시장(주금공 MBS)과 변동금리 중심의 민간 주담대 시장 이원화

* 은행(정책모기지 제외시) 대출비중 : (순수고정)2.5% (혼합형)28.8% (변동형)68.7%

- 장기고정금리 주담대(25.7%) 취급을 위한 자금조달기반이 미비하여 해외 주요국(美 85%, 佛 97%, 獨 90%) 대비 고정금리 비중이 낮은 상황

- 은행권은 신용대출에 대해 시장금리 변화에 따른 변동이 큰 대출 상품(은행채 및 CD에 금리연동) 위주로 취급(86%)

* '23.2말 기준금리 비중(%): (은행채·CD 등) 85.5, (신규 코픽스) 8.4, (잔액 코픽스) 2.5
5대 시중은행은 금리변동이 작은 코픽스 기반 신용대출상품의 종류가 매우 제한적

- 신용대출에 대한 차주의 금리선택권이 제한되어 있고, 금리 상승기에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차주에게 전가

- 대출금리가 한은 기준금리·시장금리(은행채, CD 등)보다 큰 폭으로 상승*함에 따라 대출금리 산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비판** 증대

* '21.6월 대비 '22.11월 금리 상승폭(%p)

: (한은 기준금리) +2.75 (은행채 1년) +3.95 (CD) +3.35 (대출금리) +2.87 (신용대출) +4.10

** 대출금리가 금리상승기에는 빠르게 상승 하락기에는 천천히 하락 / 시장금리보다 큰 폭으로 상승 등

(2) 개선방안

- ◆ 고정금리 등 금리변동이 작은 대출상품을 활성화하여 차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, 대출금리의 조정속도와 폭에 대한 일관성·합리성을 확보

①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통한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

- 은행이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인체계 구축
 - * ①고정금리/분할상환 목표비중 관리기준을 '장가·고정금리' 대출 확대로 변경, ②주신보 출연료 우대, 변동금리 대출실적을 차등예보료에 반영, ③중도상환수수료 완화방안 검토 등
- 정책금융기관 역할 다변화를 통한 민간 고정금리 주담대 공급 지원
 - * ①주금공 역할 다변화 ②중장기적으로 주금공 MBS 물량조정을 통한 커버드본드 수요 확보 등
- 민간 중심의 고정금리 주담대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프라 개편
 - * ①커버드본드 발행유인 강화 및 투자자 다변화를 통해 커버드본드 활성화 지원, ②변동금리에 대한 예대율 차등화 등

☞ 既 발표(5.25일)한 추진계획에 따라 과제별 검토중

※ 과제별 세부일정은 "가계부채 질적구조개선을 위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(5.25일)" 참조

② 변동성이 작은 코픽스와 연동된 신용대출상품 출시·취급 확대

- * 금리유형별 표준편차(221~233월중) : (은행채 1Y) 1.07 > (신규 코픽스) 1.01 > (신잔액 코픽스) 0.80
- 은행들이 변동성이 작은 신잔액 코픽스와 연동되는 신용대출 상품을 개발하고 하반기 중 본격 출시·운영 예정
 - ※ 수협은행·전북은행·경남은행·하나은행은 이미 관련 상품 판매중

☞ '23.하반기, 신잔액코픽스 연동 신용대출상품 출시 예정*

* 3분기 : 신한, 우리, 광주, 부산 / 4분기 : 농협, 기업, 국민, 카카오 / 24년 : SC

③ 대출금리산정체계 일관성·합리성 확보

- 은행별 자체 금리산정 점검시(반기별) 대출금리 조정 속도의 일관성과 조정 폭의 합리성을 집중 점검
 - * 은행별 전체 가계대출의 기준금리, 가산금리, 우대금리를 시계열로 비교·분석할 수 있도록 공시항목 세분화 → 기준금리 변동시 가산·우대금리 조정폭 확인 가능
- 대출금리 내 가산금리 구성 항목의 과대계상 여부 등 산정·운영 체계의 합리적 산정 여부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(진행중)

☞ '23.하반기, 자체점검(은행권) 및 금리체계점검(금융당국)을 통해 금리산정체계 합리성 제고를 유도 (→ 필요시 모범규준 개정)

3 손실흡수능력 제고

(1) 현황 및 문제점

- '22년부터 금리·환율의 가파른 상승,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건전성 악화 우려 등 은행권 전반의 불확실성이 증대
 - '22.3분기 이후 금리상승, 경기둔화, 부동산시장 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연체율 상승('23.3월 0.33% / 전년말 대비 0.08%p 상승)
 - * 은행권 연체율(%) : (17말) 0.36 (19말) 0.36 (20말) 0.28 (21말) 0.21 (22말) 0.25 (23.2) 0.36 (23.3) 0.33
 - 최근 美 SVB·퍼스트리퍼블릭 파산, 크레딧스위스 사태 등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은행권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
- 아직은 은행권의 손실흡수 능력은 양호하나, 불확실성 증대 속에 추가적인 건전성 확보가 필요
 - '22.12월 보통주자본비율은 12.61%로 규제비율(7.0%~8.0%)을 상회하나, 채권평가손실, 연체율 증가 등 영향으로 '21년말 대비 하락(△0.4%p)
 - 주요국과 비교시에도 자본적정성이 상대적으로 미흡*한 상황
 - * '22.12말 보통주자본비율(CET1): (EU) 15.27%, (英) 16.06%, (美) 12.55%, (韓) 12.61%
 - 충당금 적립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, 연체율 상승세 등 감안 필요
 - * 은행권 대손충당금(조원) 및 대손충당금 적립률(고정하여신 대비) : (18) 104.2(19.1%) (19) 112.1(17.2%) (20) 138.3(19.4%) (21) 165.9(19.5%) (22) 227.2(23.0%) (23.3) 229.9(24.0%)

(2) 개선방안

- ◆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은행권 수익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추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자본 확충·충당금 적립 제도 정비

①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

- 기업신용 증가, 배당확대·채권손실 등에 따른 자본비율 하락, 연체율 상승 등을 고려하여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

☞ 금융당국은 '23.5.24일 경기대응완충자본 1%p를 부과(금융위 의결)하였고, 은행권 자본확충 상황 모니터링할 계획

☞ 은행권은 '24.5월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1%p를 포함한 규제비율 (8~9%) 및 버퍼 등을 고려하여 추가자본을 적립할 것으로 예상

②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

- 은행별 리스크관리 수준,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
- 은행 스트레스테스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테스트的全过程에 대한 검증,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정비도 병행

☞ '23.하반기, 스트레스완충자본 시뮬레이션 등 시범운영 예정

③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 도입

- 향후 예상되는 손실 대비 대손충당금·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시,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☞ '23.3분기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완료 예정

④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·보완체계 구축

-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은행의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, 점검결과가 미흡시 개선요구

※ '23.1분기 대손충당금 6,485억원 추가적립 (당초계획 3,104억원 → 9,589억원)

☞ '23.3분기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완료 예정

4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

(1) 현황 및 문제점

- 국내은행의 수익구조는 글로벌 은행에 비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간 차이에 기반한 이자이익 중심*(최근 5년 평균 이자이익 비중 : 韓 88%, 美 : 70%)

* 총 이익 중 이자이익 비중(%) : (18) 88.0 (19) 86.0 (20) 84.9 (21) 86.8 (22) 94.3

- 국내은행의 경우 ROA, 순이자마진 등 수익성지표도 미국은행에 비해 낮은 상황

* 22년말 기준 美 5대은행 모두 ROA 0.9% 이상, NIM 2.3% 이상이나, 韓 5대 은행은 ROA 0.7% 이하, NIM 1.8% 이하

- 이자이익에 치우친 수익구조는 경기변동·시장금리 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어, 은행 건전성 확보·유지에도 부정적 작용 우려

- 은행은 비금융업 영위*·투자**가 제한되어 있고, 수수료 중대도 어려운 상황에서, 고객 자산을 관리·증식하는 자산관리서비스도 미흡

* 비금융 부실의 전이 방지, 금융의 산업지배력 차단 등을 위해 은행에 금융업·금융유관업만 허용

** 대주주 발행 비상장주식은 계열사 확장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으로 자본비율의 0.5%까지만 취득 허용

- 은행에 대해 투자자문업은 허용되어 있으나, 이를 활용하는 은행이 거의 없는 상황(1개 은행만 등록)

- 국내은행들은 국내시장에만 머물고 있어 해외 비즈니스가 취약하여 글로벌 경쟁력도 부족한 상황

* 21년 The Banker誌 선정 세계 100대 은행내 6개 은행이 위치
→ KB(62위), 산은(63위), 신한(64위), 하나(73위), 기은(94위), 우리(96위)

- 해외점포 수가 지난 5년간 약 9% 늘었고, 해외점포의 당기순이익은 은행권 총 당기순이익의 10% 미만에 불과

* 은행의 해외점포(개) : (18년) 189 (19년) 195 (20년) 195 (21년) 203 (22년) 207
해외점포 경영실적(21년) : 당기순이익 11.7억달러 / 총 당기순이익(16.5조원)의 약 10% 미만

(2) 개선방안

◆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, 금융-비금융 융합 촉진, 벤처투자 및 해외진출 확대 등을 통해 은행권 업무와 수익원을 다변화

※ 고객에게 부담을 주는 각종 수수료(ATM 수수료, 외환수입수수료 등)는 현행 유지 또는 감면

① 은행의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

- 은행의 투자자문업(‘21.10월 既 허용)을 보다 활성화*하여 마이데이터를 통해 공유된 고객정보를 분석하여 맞춤형 상품 추천 서비스 등 제공

* (기존) 부동산 관련 자문만 가능 → (추가) 금융상품 자문 가능

- 신탁 가능 재산 확대, 전문기관 위탁 허용 등 신탁업 혁신*을 통해 고객 특성에 맞는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출시를 적극 지원

* 다양한 재산 신탁, 비금융전문사(병원회계법인 등) 협업 허용 등을 통해 다양한 신탁상품 출현 지원

☞ 신탁업 혁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(하반기 내 국회 제출)

☞ 은행에 투자일임 허용 문제는 투자자문·신탁업 등을 통한 자산관리서비스의 성과를 보아가며 추후 검토

② 은행을 통한 금융·비금융 융합 촉진

- 금융과 비금융간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 출현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의 비금융업 수행을 합리적 범위내에서 허용

☞ '23.3분기내 세부방안 별도 발표 예정

③ 은행의 벤처투자 확대

- 대주주가 발행한 벤처투자조합·신기술사업투자조합 지분증권에 대해 은행의 취득한도 2배 상향(자기자본 0.5% → 1%/4.20일 발표)

* 5대 시중은행 '22년 7,758억원 벤처투자

☞ '23.7월중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완료 예정

④ 은행권 해외진출 확대

- 해외지점 또는 해외자회사가 현지 금융회사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국내법으로 인한 해외 영업활동이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

☞ '23.7월중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

5 성과보수체계 개선 및 주주환원정책 점검

(1) 현황 및 문제점

- 고물가,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면서 은행의 고객인 국민들의 대출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,

- '22년 은행권이 역대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, 그 수익으로 고액의 성과급·배당을 지급함에 따라 이에 대한 비판 확산

- 임원의 성과보수체계의 경우, 이연지급 및 성과급 환수·조정 등이 외국에 비해 축소된 형태로 제한적으로 운영*되고 있으며,

* 지배구조법상 최소 기준(3년, 40% 이상)을 맞추는 수준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다수이며, 일부 금융기관은 성과보수 유보제도도 부재

-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총액 한도만 승인할 뿐, 개별 임원별 보수지급액 등이 공개되지 않는 등 정보도 부족한 상황

- 직원의 특별성과급, 희망퇴직금, 배당 등에 대해서는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는 등 투명성·정보접근성이 제한되어 있다는 비판 제기

(2) 개선방안

◆ 지배구조법 개정 등을 통해 임원 성과보수체계를 개선하고, 은행의 수익이 어떻게 형성되고 배분되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과 시장의 견제·감시 기능을 강화

① 임원에 대한 성과보수제도 개선

- 이연지급을 확대(예시 : 최소이연비율 40% → 50%, 이연기간 3년 → 5년)하고, 금융회사의 성과급 조정(malus)·환수(claw back) 실효성 제고

☞ TF를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내 개정 추진 예정

-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(Say-on-Pay)토록 하고, 개별 임원의 보수지급액 공시도 강화

☞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

② 은행의 경영현황 자율공개 방안 마련

- 은행이 무슨 일을 하는지, 어떻게 수익을 내며 발생한 수익을 어디에 활용하는지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
 - 기존 사업보고서·감사보고서 등에 비해 국민과 시장이 경영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경영현황을 자율 공개
- 특히, 임원 성과급 뿐 아니라 직원의 성과급·희망퇴직금 및 배당현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공개

<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 구성(案) >

구 성	세 부 항 목
0. 은행 개요	은행 기본정보(총자산, 영업점 및 직원수 등)
1. 자산/부채	대출채권 구성 / 유가증권 구성 / 예수금 구성 / 차입금 및 사채 구성
2. 수익/비용	이자이익(예대금리차 포함) / 수수료이익 / 급여(성과급, 희망퇴직금 등 포함) / 사회공헌 실적 / 총당금
3. 당기순이익 활용	자본적립 현황 / 배당 현황

☞ '23.3분기 시범 작성·공개 예정 / 차년도 4월부터 본격 시행
* '22년 경영현황 → '23년 하반기 작성 / '23년 이후 경영현황 → 차기년도 4월말까지 작성

6 사회공헌활동 활성화

(1) 현황 및 문제점

- 국내은행의 사회공헌 지출액*은 연간 1조원 수준(당기순이익의 6%)
 - * 사회공헌지출액(억원) : ('18) 9,905 ('19) 11,359 ('20) 10,929 ('21) 10,617 ('22) 11,305
- 공시항목에는 사회공헌 취지에 맞지 않는 항목(브랜드사용료 등), 법정 분담금(서민금융진흥원 분담금) 등이 포함
- 국내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사**와 달리 중장기 방향성 없이 기부 형식의 유사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
 - * (Citi) '30년까지 ESG 관련 1조달러 지출 계획 / 흑인기업 대출 등 인종차별에 중점 (WellsFargo) 소수인종 주거지원, 고령자 임차인 보호 등에 집중
- 최근 경기둔화 등 국민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
 - 은행권은 역대 최고 수준의 이익을 거둬들여 금리부담을 경감하는 상품 취급 등 상생금융*에 대한 국민의 요구 증대
 - * 가계대출(주택·전세·신용) 금리 인하, 제2금융권 대출의 은행대출 대환 등
- 인터넷·모바일 거래 확산으로 점포수가 과도하게 축소됨에 따라 비대면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금융접근성이 악화
 - * 은행 점포수(개) : ('19) 6,709 ('20) 6,405 ('21) 6,094 ('22) 5,800

(2) 개선방안

◆ 은행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, 상생금융 확대, 은행 점포폐쇄 절차 내실화 등을 통해 은행이 국민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금융접근성 제고를 통한 금융이용 불편을 해소

① 사회공헌 공시제도 정비 및 중장기 사회공헌 방향설정

- 사회공헌 공시항목을 취지·성격에 따라 체계적 분류하고, 정량적 성과외에도 정성적 성과(예: 청년도약계좌)를 공시하는 등 공시제도 정비

- 은행별로 중장기적인 사회공헌 전략·단계별 목표를 수립하도록 하여 개별 은행의 사회공헌을 확대하도록 유도

☞ '23.8월중 은행 사회공헌활동 공시 제도개선방안 마련
* '22년 사회공헌실적은 '23.8월 공시 / '23년 이후에는 차년도 7월 공시

② 은행권 상생금융 활성화 및 경영문화 정착 여건 조성

- 은행 상생금융 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접근성 제고 및 은행의 상생금융 확대 유도를 위해 관련 안내 강화
 - * 금융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상생금융 상품을 손쉽게 확인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권 공통 및 개별은행 상품을 통합안내(은행연합회 등)
- 상생금융이 전사적 통합경영전략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영 관리 측면의 개선 및 상생문화 확산 유도
 - 모범사례 공유 등을 통해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생금융 전담 조직 운영 및 기능 확대, 본점 및 지점 성과평가 개선 등 유도
- 취약계층 등 금융소비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「상생·협력 금융新상품」 우수사례를 정기적으로 선정* 발표
 - * 은행 등 금융회사의 자체 개발상품 중 상품 특징효과판매관리 동향 등을 감안하여 선정
 - 특히, 우수사례 선정상품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를 지원하고,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은행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

☞ '23.하반기중 상생금융 간담회 개최
☞ '23.하반기중 우수사례 선정·포상 예정

③ 은행점포 폐쇄절차 내실화 및 은행 대리업 제도 도입 검토

- 점포폐쇄 결정시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, 폐쇄시에는 공동점포·이동점포 등 실효적 대체수단을 마련
 - 은행별 점포 신설·폐쇄 현황을 비교공시하고, 폐쇄된 점포 이용 고객에 대해서는 우대금리 적용·수수료 감면 등 실질적 지원을 제공
- 오프라인 채널 확대를 위해 은행권 공동대리점, 우체국 등에게 은행 대리업 허용 검토

☞ '23.5.1일 은행점포폐쇄 내실화방안 시행
☞ '23.분기중 은행 대리업 도입방안 마련

Ⅲ. 향후 계획

- 금번 은행권 경영·영업 관행·제도 개선 방안을 속도감있게 추진 하기 위해 과제별 세부계획에 따라 신속히 추진할 예정
- 신규 인가 신청 등에 대해서는 대주주 자격요건·사업계획 등을 엄격히 심사하되, 빠른 시일내 진입이 가능토록 지원
-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도록 각각의 세부방안이 마련되는대로 즉각 발표·추진
-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기관·업권과의 협의 등을 거쳐 조속히 법령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절차 추진
- 앞으로도 은행권 경쟁 촉진 등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지속 제고하기 위해
- 민간전문가·업권 등과 긴밀히 소통하여 추가적인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

➡ 은행권 경쟁과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익을 증진 하고 은행업의 경쟁력을 제고

- ① “가격(금리)”과 “서비스”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 촉진으로 국민들에게 금리인하, 선택권 확대 등 금융편익 제고
- ② 은행권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“공공적 역할”을 수행 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·강화
- ③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여 위기시 회복탄력성을 확고히 갖출 수 있도록 “재무건전성”을 제고
- ④ 은행권의 적극적인 혁신과 해외진출 등을 통해 “글로벌 경쟁력”을 제고하여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성장동력을 지속 확충

Ⅳ. 추진현황 및 추진일정

주요 과제	추진현황 및 추진일정
① 은행권 경쟁 촉진	
▪ 기존 금융사의 전환·합병	전환 신청시 전환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전환여부 결정
▪ 시중은행·지방은행·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	건전성과 사업계획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 후 신규 인가
▪ 특화전문은행 도입	현행 제도 활용 → 향후 별도 제도마련 여부 검토
▪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	'23.7월중 인가지침 개선방안 발표 예정
▪ 지방은행·외은지점 규제개선	'23.7월중 시행 예정
▪ 비은행권의 지급결제업무	담보제도, 유동성·건전성 관리 등에 대해 추가 검토하여 추진
▪ 금융권간, 금융-IT간 협업 강화	인터넷전문은행·지방은행 공동대출상품 출시 지원, '23.3분기내 업무위탁 제도개선방안 마련 예정
▪ 대한대출인프라 구축	'23.12월 주담대까지 확대 예정
▪ 온라인 예금중개서비스	'23.12월 수시입출금 포함, 모집한도 상향 등 검토
▪ 예대금리차 공시 강화	'23.7월부터 개선된 예대금리차 공시 시행 예정
② 고정금리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	
▪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	既 발표(5.25일)한 추진계획에 따라 과제별 검토중
▪ 변동성이 작은 신용대출상품 출시·취급확대	'23.하반기, 신잔액코픽스 연동 신용대출상품 출시 예정
▪ 금리산정체계 일관성합리성 제고	'23.하반기, 자체점검, 금리체계점검을 통해 합리성 제고 유도
③ 손실흡수능력 제고	
▪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	'23.5월 1%p 부과, 자본확충 상황 모니터링할 계획
▪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	'23.하반기, 스트레스완충자본 시뮬레이션 등 시범운영 예정
▪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	'23.3분기내 감독규정 개정 완료 예정
▪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	'23.3분기내 감독규정 개정 완료 예정
④ 비이자이익 확대	
▪ 은행의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	'23.하반기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제출 예정(신탁업 혁신 관련)
▪ 금융·비금융 융합촉진	'23.3분기내 세부방안 별도 발표 예정
▪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한도 상향	'23.7월중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완료 예정
▪ 은행권 해외진출 확대	'23.7월중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
⑤ 성과보수 체계개선 및 주주환원정책점검	
▪ 임원의 이연지급 확대 및 성과급 조정·환수 기준 마련	TF를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'23.하반기 개정 추진 예정
▪ 임원의 성과보수체계 및 보수지급액 공시 강화	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
▪ 은행 경영현황 자율공개	23.3분기 시범 작성·공개 예정 / 차년도 4월부터 본격 시행
⑥ 사회공헌활동 활성화	
▪ 사회공헌활동 공시 정비	'23.8월중 은행 사회공헌활동 공시 제도개선방안 마련
▪ 상생금융 활성화 및 경영문화 정착 여건 조성	'23.하반기 상생금융 간담회 개최, 우수사례 선정·포상 예정
▪ 점포폐쇄 내실화, 은행대리업	내실화방안 시행(5.1일), '23.3분기 은행대리업 도입방안 마련

참 고

그간의 성과

① 대출금리 인하 및 예대금리차 축소

- 가계대출 금리(신규취급) : 2월 5.22% → 5월 4.83%(△39bp)
- 가계대출 예대금리차(신규취급) : 2월 1.68% → 5월 1.27%(△41bp)

②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인프라

- 5.31일 이후 6.30일까지 총 26,883건, 6,684억원의 이동 발생

③ 은행권 이자이익의 상승세 둔화



④ 은행권의 재무건전성 제고



⑤ 상생금융 9,128억원 지원 효과

- 현재 은행권(7개 은행) 발표 기준 가계(일반 및 취약차주) 및 중소기업·소상공인 대상 원리금 상환 부담 등 경감 예상효과는 9,128억원* (관련 대출 135조원)

* ① 가계대출(일반) 4,099억원, ② 가계 취약차주 1,546억원, ③ 중소기업·소상공인 3,485억원

→ '23.5월까지 실제 지원효과는 2,063억원 수준 추산(관련 대출 24.2조원)